

'5·18 진상규명' 위해 전국에서 싸웠다

독재에 항거하다 희생 1980년대 열사 127명 기록 서울·부산 등지서 투쟁...광주서 추모 전시회 눈길

1980년 광주 학살의 상황을 전국에 알리고자 스스로 오월 영령이 된 열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전국의 5·18들'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이 5·18 39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던 전국 민족민주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6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오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희생된 80년대 전국의 5·18 열사 127명을 담았다.

열사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직후 맨 처음 광주의 진실을 외치며 목숨을 끊은 서강대생 김기열 열사 이후 광주의 참극을 목도하거나 알게 된 뒤 전두환 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운 이들이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광주 전남 연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투쟁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5·18 진상규명'을 외친 열사 희생자는 모두 16명이다. 5·18 이후 전체 민족민주열사는 지난해 범국민추모제 봉안제 대상 기준 127명에 달한다.

이들은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목포, 인천 등지의 대학생, 노동자, 택시운전사 등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광주정신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사했다.

이력제 5·18기록관 학예연구사는 "5·

18 당시 광주가 왜곡된 섬이 아니라 전국이 광주를 아파했고, 또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시회에선 광주 학살의 상황을 알리고자 전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함께 싸웠고, 광주와 함께 피눈물과 울분을 쏟아

냈던 시간이었음을 사진과 기록을 통해 접해볼 수 있다.

전시 구성은 ▲80년대 주요 민주화운동 시대별 흐름 ▲시기별 민족민주열사들 ▲시기별 알려지지 않은 '5·18진상규명' 열사가 마지막 남긴 말들 ▲열사에 남기고 싶은 말들 ▲전국의 민족민주열사묘역,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개 ▲포토존 ▲전체 열사 소개 영상 등으로 나뉜다.

이번 기획전시는 1980년대로 한정했으나 5·18 40주년에는 모든 전국의 열사

들을 조망할 계획이다. 나희갑 기록관장은 "5월18일 광주의 땅에서 일어났던 운동은 실패한 성공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5·18에 대한 학문적 연구 계기와 39주년 5·18기념식을 전국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5·18들'은 지난 2017년 5월18일 제37주년 5·18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5·18 이후 광주정신으로 삶을 살며 죽음을 택한 열사 4명을 호명하며, 작명해줬다. /최환준기자



5·18 강경진압 자백하라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2일 서울 서초구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자택 앞에서 '행동의 날'을 열고 광주 강경진압 내막 등을 밝히려고 촉구하고 있다.

살해당한 여중생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해

친모도 구속, 친부·계부에게 그동안 학대 당해

의붓아버지로부터 살인을 당한 여중생은 친엄마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여중생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보복성 살인을 당한데다 한때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전남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 이어 잇따라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씨와 함께 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

에서 딸의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도 유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남편 김씨는 범행 다음날 광주 동구 나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벽돌이 담긴 마대 자루에 A양을 묶어 버렸다.

유씨는 김씨 혼자서 범행했고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전남 자정계 심야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다.

더욱이 A양은 그동안 친부로부터도 학대당한 데다 경찰 및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이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을 목포경찰서에 알렸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가 10살인 A양의 종아리를 청소 도구로 때렸다'며 신고, 경찰은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해자인 친부와 피해자 A양을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했다.

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고, 친부는 벌금형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A양은 계부 김씨와 함께 광주의 친모 유씨 집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김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A양을 때렸고 집에서 쫓아 내기도 했다. 실제 김씨는 2017년 11월 A양을 때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속된 학대를 못 견딘 A

양은 지난해 초부터 다시 그간 매를 들어서 격리됐었던 친부의 목포 집에서 살았다.

이후 A양은 지난달 9일 김씨의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전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오후 2-3월께 광주 소재 야산에서 강간당한 뺨한 사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죽여버리겠다"며 격분했다.

이후 김씨는 유씨와 생후 13개월 된 친아들과 가족여행 중 지난달 26일 목포를 찾아 범행지구(마대·청테이프·노곤)를 구입한 뒤 유씨를 통해 A양을 전화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후 다음날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을 살해했다.

A양은 그동안 학대당했던 사실에 대해 꾸준히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오승지기자

'재직증명서 위조' 개인회생 브로커 3명 구속

광주지검, 변호사·법무사 등은 불구속 기소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법원 제출용 자료를 위·변조한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2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브로커 사무실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격으로 총 339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 7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회생 자격을 얻고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하거나 통장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변호사 1명과 법무사 4명에 게 매달 300만~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브로커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매달 5천만원의 광고료를 들여가며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1만여 개의 '070'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과 전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했고 서류를 이상하게 여긴 광주지방법원 측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탐미를 잡았다. /오승지기자

조합원에 금품제공 현직조합장 검찰 고발

전남선관위, 조합원 과태료 검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광주 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11월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총 12만5천원 상

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치러진 지난 3월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조합장으로 근무 중이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인권위, 의붓딸 살해사건 직권조사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붓아버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신고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능장 수사로 피해자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형사 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시스템과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의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파트에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만취한 30대 남성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방가로 소란을 피우자 시끄럽다며 주민 간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이 발생.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10분께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백모(34)씨는 주

먹으로 박모(60)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박씨는 이에 대항해 먹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집에 귀가하던 백씨가 술에 취해 큰 목소리로 떠드는 것을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이것도 못하는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늦은 저녁시간에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혀를 꼴꼴. /최환준기자

오천경매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경매투자자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싼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오천경매
010-3605-5000